1
OECD 사무총장이 본 한국경제 평가

Donald J. Johnston

본인은 먼저 이러한 발표기회를 마련해 준 세계경제연구원 사공 일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본인에게 두 가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OECD가 중요하게 다루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명한 학자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를 맞은 이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어려운 조치들을 신속하게 수행해 온 한국인들의 결단과 용기에 대해 찬사를 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한국에서 위기가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시행한 용기 있는 정책들은 이미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본받고 있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 속의 경제대국의 하나로 발돋움한 놀라운 한국경제의 성장사를 전제로 했을 때, 한국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再도약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바로 용기,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 강연에서 본인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주제를 다룰 것이다. 즉 세계경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경제 전망, 한국과 OECD 관계 등이 그것이다.

1999년 세계경제전망

OECD는 지난 1998년 12월 발간한 『경제전망』에서 1999년의 세계경제는 약 2%내외의 완만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되고, 유럽 경제의 성장률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침체국면 탈출이 전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를 대부분 상쇄시킬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국가들의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률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러 면에서 이런 예측은 여전히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시경제전망은 종종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빗나가게 된다. 더욱이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경제여건이 매우 유동적이면서도 불확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예측은 언제든지 빗나갈 가능성도 있다.

1998년 12월에 나온 OECD의 경제전망은 향후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들을 강조했다. 작년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세계금융혼란에서 나타났듯이 OECD내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붕괴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붕괴요인들은 세계경제 불안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브라질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브라질 뿐 아니라 인접국가들의 단기성장전망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이것은 무역과 금융부문의 연계고리를 통해 OECD 회원국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영향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홍콩달러는 절하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의 고정환율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국가들의 금융시장은 아직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금융불안이 계속될 경우 결국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1999년 중 세계경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미국경제의 강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경제의 활력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증가율은 여전히 높고, 소비자 신뢰도도 강했다. 우리는 1998년에 기업 이윤이 줄어들 경우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기업들의 이윤은 우리를 포함한 많은 다른 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경제에는 중요한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유동성 포지션이 계속 낮아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들의 투자지출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주가하락은 가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과거부터 널리 사용해 오던 평가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미국의 주식가격은 매우 높은 것 같다. 따라서 시장에서 주가조정이 일어날 위험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이는 주가가 매우 낮은 경우에도 관측되는 현상이다. 만약 역사적 평가 기준에 따른다면 투자자들은 이런 점들을 항상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일본이 다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이 단일통화체제를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신흥 개도국들에 대한 국경간 자본흐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일본 : 경제회복여건의 조성〉

일본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실업자의 행렬이 계속 늘어나면서 취업감소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신뢰도는 비록 하락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개선될 조짐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998

년 여름 이후 이루어진 엔화가치의 상승은 그나마 최근까지 유일하게 활력을 보여주었던 수출부문의 전망마저 악화시킴으로써 일본경제전망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더욱이 1998년 12월 이후 장기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8년 가을에 OECD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당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여전히 허약하다. 1998년 11월 일본 의회는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산더미 같은 부실여신과 은행들의 자본금부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를 침체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상태다. 11월 중순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해 새로운 재정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1998년 중에 두 번째로 나온 조치이자, 1992년 이후에 여덟 번째로 나온 조치이다. 이번 시책은 최근까지 나온 정책들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GNP의 약 5%에 가까운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가을, 통화당국 역시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들이 일본경제의 회복전망을 개선시켜 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재정지출확대가 GNP의 5%에 가까운 규모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도 정부예산은 당초 긴축적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증가되는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원래의 예산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60조엔의 추가적인 재정자극이 어느 정도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팽창이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의 정부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재원조달 필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최근에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도 시장에 정부공채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더욱이 단기적인 고용문제와 퇴직연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가계부문은 세금감면액을 소비하기보다 오히려 저축하려고 할 지도 모른다. 은행부문에 있어서 부실채권의 공식적인 발표액은 민간부문이 추정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작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 하에서 일본 정책당국이 경제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정책금리가 사실상 더 인하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시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국이 유동성을 더 큰 폭으로 증대시킬 수는 있다. 많은 논평자들도 경제회복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통화공급 증가를 통한 신용확대와 총유동성 증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이 현재 일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다고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을 정책결정자들이 수수방관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부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누그러질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연금체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계획에 대한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노동연령 인구의 미래 연금 수혜자격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가계부문의 신뢰도를 짓눌러온 주요 불안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없애 줄 것이다.

일본에 관한 논의를 결론짓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본은 경제전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정책분야에서 많은 조치들을 취할 여지가 있으며, 또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의 왜곡효

과를 줄이기 위해 조세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자극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장벽과 각종 가격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 토지시장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자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이미 시장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와 기업들은 여러 부문에서 추진된 규제철폐와 규제개혁으로부터 이미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OECD내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유럽: 유로화의 성공〉

1999년 1월 1일 11개 참가국들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킴으로써 유로貨가 출범했다. 2002년까지 각국 통화는 모두 유로貨로 대체될 것이다. 유로貨 체제의 직접적인 목적은 1992년에 구성된 유럽연합(EU)이 단일시장의 개념을 넘어 경제적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또한 2차 대전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보다 폭넓은 과정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단일통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유로지역에 들어온 모든 국가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국내적인 목적을 위해 더 이상 개별적으로 이자율이나 환율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유로지역 전체를 위한 통화정책은 프랑크프루트에 소재한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은행의 주된 목표는 물가안정(인플레이션율을 연 2% 이하로 유지)이다. 개별국가들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수단을 잃게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순환과도 같은 일반적인 어려움에 유로지역 국가들이 직면했을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유로지역 전체의 경제적 불균형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해결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인플레 압력이 있으면 통화긴축을 실시하고, 경기하강이 임박할 때는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처하는 일은 유로지역 국가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유로화 체제는 아직 재정정책을 중앙으로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자국내 경제적 불균형－혹은 非대칭적인 경제적 충격－에 직면한 회원국들은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경제가 과열되더라도 다른 회원국들에게 조세를 내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제 이러한 자국 내 불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국내 재정정책이 자국에서 발생한 충격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로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에 일정한 한계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는 단일통화 협상에서 정한 '긴급구제금융은 없다'는 원칙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규칙은 각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기순환조정(Cyclically-adjusted)을 거친 재정수지가 '균형에 가까운'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기하강기에 재정적자 한도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로 회원국들 중 몇몇 소수의 회원국들만이 '균형에 가까운' 재정적자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유로 회원국들은 경기대응조치는 물론이고 자동안정장치마저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비록 회원국들이 자국의 구조적 예산을 균형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더라도 재량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제약될 것이다. 실제로 유로 회원국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아주 튼튼한 재정 포지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예기치 못한 지역적인 경제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적인 경제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상품 시장의 유연성을 더 높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지역

들이 어떤 충격을 받은 후 균형을 회복하는 데 유연한 시장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지방의 경기하강은 보통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임금수준이 다른 지역들보다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로 회원국들에서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다. 이것이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유로 회원국들이 자국의 시장들을 보다 유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많다. OECD의 직업전략(Jobs Strategy) 팀은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을 위한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률을 낮추고, 시장의 적응성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구조개혁－그 개혁은 사회보장에 대한 각국의 약속과 양립될 수 있어야만 한다－은 현재 유로 회원국들에게 두 가지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충격에 대한 시장의 조정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실업률이 떨어지고 재정상태가 튼튼해지면서 개별 유로 회원국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충격에 정책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이다.

유럽에 관한 얘기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즉, 유로화가 의도하는 경제통합의 이익을 구현하는 일은 상당한 도전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통합이 심화될 때 기대되는 주요 이익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이다. 이는 다시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효율성 증대는 주로 생산기업들이 대규모 통합시장을 위한 생산체제에 맞게 자신들의 기업활동을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규모로 통합되고 경쟁적인 시장의 원리가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는 불가피하게 유로지역 내 전체 부문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모든 유로 회원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들이 소수의 지역으로 통합되고, 또 더 적은 수의 기업들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아마도 가장 명백한 예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시장 거래는 유로지역 내 각 회원국들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금융기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

다. 경쟁압력이 증가되면 거의 확실히 금융부문 내에서 흡수합병, 구조조정, 신설합병 등이 늘어날 것이다. 단 기업폐쇄, 해고 등에 관한 각국의 규제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결과 금융시장은 더 광범위해지고, 더 깊어지며, 유동성이 높아지고, 보다 고객중심적인 형태로 변할 것이다. 이런 시장은 유로화가 두 개의 중심적인 국제통화의 하나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 이런 금융시장은 생산적인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을 보다 근본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국제자본흐름의 안정화〉

국경간 자본흐름의 불안정은 1990년대에 나타난 가장 혼란스런 경제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본인은 이런 불안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강력한 자본유입과 뒤이어 나타난 급격한 자본유출－이는 금융위기를 앞당긴다－은 많은 신흥 공업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이다. 1990년대 중반의 멕시코, 1997년의 아시아 각국들, 1998년의 러시아, 보다 최근에는 브라질 등이 그 예이다. 이런 변동성의 근본원인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대출기관들과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자본유출은 해당 국가들을 깊은 불황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급증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높였다.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신흥 시장에 대한 관련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국제 포럼들에서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보다 안정된 자본흐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위기발생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신흥 개도국들과 선진국들 모두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다섯 개 부문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고, 대규모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는 종종 대외 및 대내 불균형 상태가 대규모로 누적된 이후에 시작되었다.

둘째, 신흥 개도국들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위기 이전에 실시했던 것보다 더 신축적인 환율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정환율이 인플레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맞았던 많은 국가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환율을 고정시켰고, 그에 따른 대외 경쟁력 상실이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경제와 금융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데이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외환보유고 및 정부공채의 상환만기 구조 등에 관한 불완전하면서도 때늦은 공식 데이터가 과거에는 경제불안요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모두 차입기관들과 대출기관들의 불투명한 금융보고 관행이 시장원칙을 훼손하고, 감독기관의 임무수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 많은 개도국들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기준들이 강화되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 G7 국가들은 규제의 초점을 자국내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제도와 건전성기준에 맞추기로 천명해 왔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말이다.

다섯째, 국제사회는 국제적인 구제금융 패키지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찾고 있다. 만약 선진국들의 투자자들과 대출기관들이 그런 구제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한 위험평가에 더 유의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논의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제안은 IMF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기구는 불리한 전염효과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임시신용한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이 금융안정을 회복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조정을 약속한 경우에 한해서 말이다.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종의 국제적인 최종대출기관을 설립하자는 요청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런 유형의 효과적인 국제기구를 각국의 주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고 설립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간부문을 국제적인 구제계획에 더 깊이 연계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적인 최종대출기구가 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결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 사태가 잘못될 경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국제금융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한다. 신뢰할만한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흥 개도국들이 자본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쪽에 마음이 끌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자국을 영원히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 선진국 경제에서도 국경간 자본흐름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국내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국제금융제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다. 따라서 각국은 즉각 본인이 언급했던 5개 분야에서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위기와 개혁

1995년 12월 한국이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35년간에 걸친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변화의 절정판이었다. 이런 성장과 변화를 통해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세계 11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자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은 어느 OECD 회원국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가장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았다. 지속적인 고도성장, 높은 수준의 저축과 투자, 완만한 인플레이션, 소규모 국제수지 적자, 대규모 재정흑자 등과 같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강점에 비춰볼 때 그 위기는 거의 예상 밖이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떤 구조적인 약점들이 1997년 아시아를 휩쓴 금융혼란에 한국이 그토록 힘없이 굴복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근본적 약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업부문은 지나친 사업다각화로 인해 낮은 수익율과 높은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었다. 1997년 말까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약 400% 정도까지 치솟아 기업들에게 높은 채무상환 부담을 지웠다.

둘째, 한국은 아주 취약한 금융체계를 갖고 있었다. 1997년에 있었던 일련의 기업파산 사태는 은행들의 부실대출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은행들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었다.

셋째, 한국은 외환보유고에 비해 단기성 대외부채가 너무 많았다. 이는 장기자본 유입보다 단기자본 유입을 자유화시킨 정책결정 때문이었다. 이런 정책은 OECD가 권고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1997년 11월 외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Moratorium)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IMF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했을 때, 광범위한 경제개혁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요점은 한국이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시장주도형 경제로 완전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일은 기업, 노동계, 금융기관, 정부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그러한 광범위한 개혁을 실천하는데 따른 어려움들이 경제위기에 뒤이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해 증폭되었다. 금리가 30%까지 급상승했고, 1998년 중 실질 국내수요가 1/4 가량 줄어들었다. 또 인적 비용(Human cost)도 크게 증가했다. 실업이 3배나 증가했다. 아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밖에 갖추지 못한 한국에게 이런 상황은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겪었던 암흑의 날들에 비해 현재 한국경제의 전망은 훨씬 더 밝아졌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내내 두 자리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던 산업생산이 연말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둘째, 가용외환보유고가 약 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단기 외채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셋째, 원화가치는 위기 중에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약 70%

절상되었다. 비록 달러당 1,170원 대의 환율 수준은 위기 이전 환율보다 25% 정도 높은 수준이지만 말이다. 더욱이 단기금리는 오히려 위기 이전 수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6% 내외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1999년에 한국은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한국경제의 빠른 회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힘입은 것이다. 첫째, 거시경제 정책을 완화시킨 것이 경제를 침체국면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자율이 크게 인하되었다. 또한 재정부문의 '자동안정장치'가 작동하게 한 결정은 재정정책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둘째, 1999년의 성장전망은 그 동안 한국이 중요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1998년 한국경제조사』에서 권고한 개혁조치들을 한국이 잘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이런 개혁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조성함에 따라 1998년 중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격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치인 88억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부문의 개선,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핵심 개혁조치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GDP의 약 15%에 달하는 64조원을 투입하는 개혁조치들을 추진했다. 이는 엄청난 규모다. 원활하게 작동하는 은행제도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그 금액의 절반정도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나머지 반은 은행들의 증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공적 자금에 대한 접근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했다. 은행부문에 대한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신용경색을 억

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신용경색은 1998년 중 한국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또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더라면 경기회복도 지연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생존 가능한 은행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부실은행들을 튼튼한 은행들에 합병시킴으로써 이들을 폐쇄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도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릴 수 있게 되었다. 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증가는 한국의 금융부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융부문의 회복은 부실여신을 양산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재벌들이 위험성이 높은 산업으로 진출한 것은 종종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를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를 급격히 증가시켜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 기초한 재벌구조조정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개혁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 총수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둘째, 상장기업들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 외부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및 감사기준의 개선 등을 통해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필요로 했다. 과거에는 경직된 고용보장으로 인하여 인수 · 합병이 이뤄질 때에도 기업들은 보유 노동력을 사실상 줄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 2월에 개정된 노동법은 기업들이 과잉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전망을 한층 높여 주었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 조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조치와 병행 실시되었다. 이는 최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경제위기 이전에 50만명 수준이었던 실업자수가 1998년 말에는 거의 170만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8년 이전에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던 실업보험이 이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수혜 기간도 연장되었고, 올해에는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적용범

위가 넓어질 것이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정부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임시적으로 35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추가적인 개혁과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인상적이다. 경제위기와 그 후유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았다. 지난 14개월에 걸쳐 실시된 개혁의 범위는 아마 어느 OECD 회원국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시장중심체제로의 전환이 아직 진행 중이다. 1999년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거나 개혁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기조의 지속 여부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과연 성공적으로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할 것이다. 노동력의 증가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總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1999년 중에 OECD는 다시 『한국경제조사』를 발간할 것이다. 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개혁에서 아직 남아있는 주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마 가장 큰 도전은 기업부문이 여전히 안고 있는 과잉설비와 과도한 부채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기업부문의 신속한 구조조정 문제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간섭을 줄이는 문제를 어떻게 서로 조화시켜야 할까? OECD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는 대신 시장 주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위기를 유발했던 많은 문제점들은 왜곡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 산업정책의 유산들이다. 현재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경제활동이 합리적 동기에 의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첫째, 현재 기업들과 대출기관들간에 진행중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생존 가능한 기업들이 자본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실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퇴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은 현재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최선의 구도를 확보해 줄 원칙들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와 투명성, 주주의 권리와 주주들간의 평등한 대우, 주주 및 이사회의 역할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 원칙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어떤 수준인 지를 평가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금융부문의 완전한 회생은 또 다른 핵심적인 우선과제이다. 정부는 이미 상당한 자원을 금융부문에 투입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대출금이 부실화되었는지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투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즉, 앞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은행들을 위해 이런 조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98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단독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시, 감사 및 회계기준 등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OECD 금융시장 위원회는 1998년 12월 한국의 금융제도와 개혁내용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은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간에 경험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률은 1998년 말 거의 8%에 근접하였고, 앞으로도 몇 달 동안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잉 설비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부문이 험난한 구조개혁의 과정을 헤쳐 나감에 따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까지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고, 빈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근로자의 일하고 저축하려는 동기를 저해할 정도로 厚해서는 안된다. 『OECD 직업전략』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각각의 환경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다. 1999년 안에 OECD의 한 팀이 한국의 노동시장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조합결성과 단체교섭과 같은) 단체교섭권 등을 개선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일이다. 이는 그런 권리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개혁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1997년 3월의 노동법과 같은 중요한 개혁조치들과 1998년 2월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내용을 실행에 옮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여전히 未해결상태로 남아있다. 과거 한국의 노사관계의 불협화음은 노동쟁의, 조합원들의 구금이나 체포 등으로 이어졌다. 여러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태진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합법적인 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간부들을 체포·구금하는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거의 모든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 내에 수많은 규제를 양산했다. 진입과 퇴출에 대한 규제가 널리 퍼져있다. 1998년 이전에는 11,000개에 달하는 규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어떤 규제들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많은 규제들이 행정내규와 행정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 보건, 환경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규제개혁－더 효과적인 규제도입과 규제철폐를 모두 포괄－은 많은 부문에서 상품의 질과 선택 폭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 동

시에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규제개혁이 전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한국이 위기국면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OECD는 현재 규제개혁에 관한 중요한 수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이 1999년 중에 규제개혁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만들어질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규제개혁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예산적자를 제한하는 신중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한 뒤로 정부부채가 급증했다. 실업자를 지원하고, 금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들은 향후 몇 년간 정부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지도 모른다. 경제회복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부채의 급증사태를 피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부채 급증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예산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추가적인 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될 야심적인 과제들이다. 본인은 OECD가 앞서 언급했던 각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을 지원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OECD 속의 한국

앞에서 본인은 OECD가 여러모로 한국이 더 나은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다—OECD는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확실히 해 두고 싶은 점은 만약 OECD가 한국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 분명히 한국도 OECD를 돕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다.

한국은 독특하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발전과정을 밟아 왔다. 어떤 국가도 그토록 많은 것을 그렇게 빠르게 이루지 못했다. 이런 경험이 모

든 종류의 정책들에 관한 OECD 회원국들간의 논의에 기여했고, 이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값진 것들이 되고 있다.

또한 비록 한국이 불과 2년 전에 OECD 회원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서 열정과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본인은 OECD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했다. 한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非회원국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OECD를 돕고 있다. 1999년 3월 한국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OECD와 공동으로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비교적인 관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은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를 규정한 OECD 협약을 일궈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했고, 그 협약이 2월 15일 발효되었을 때 한국은 11개 發議國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은 능력있는 팀을 그 협상단에 파견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안고 있던 많은 어려운 기술적 · 법적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99년 4월 한국은 독일의 '뇌물 금지법'을 분석하는 주요 검사국들 가운데 하나로 참여할 것이다. 이는 그 협약에 참가하는 각 회원국들이 정책집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OECD와 함께 천안에 조세센터를 만들었다. 이 센터는 아시아 전역의 18개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세정책에 관련한 주요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이는 OECD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을 아시아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또 아시아 조세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단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밖에도 많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빠르게 OECD에 대해 매우 귀중한 기여국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1998년 한해 동안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놀랄 만하다. 그러한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광범위한 영

역에 걸쳐서 개혁작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 데 힘입은 것이다. 경제성장세의 회복이 곧 가시화될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은 야심적인 개혁과제들을 마무리짓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OECD의 목표는 한국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개혁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견고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수준이 OECD의 최고 선진국들 수준으로 올라서는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개혁의지에 찬사를 보내며, 한국이 그 동안 OECD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공헌에 감사를 표한다.

질의 · 응답

질문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이 너무 빠르지 않았는가?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시사한 바가 있었다. OECD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장기자본의 유입을 자유화하도록 권고했지,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했던 단기자본의 유입을 자유화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 특히 자유화의 영향으로 단기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장기자본보다는 단기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약 5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본 투자들간에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사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래 한국정부는 OECD가 권고한 것처럼 장기자본 유입 촉진을 위한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본인이 알기로는 장기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는 계획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기업인수를 비롯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당초의 자유화 계획을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도록 한국에 촉구하였다.

외국의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한국 내 자회사를 영구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폭을 더욱 확대해 주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흥 개도국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장에 투명성 뿐 아니라 시장원리와 경쟁을 도입하고, 또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시중은행들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한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OECD는 한국정부에 다른 유형의 장기 자본투자 유입을 자유화하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어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과 만기가 1년 이상인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그리고 대외 교역과 연결되어 있는 '호의적인' 국내금융 허용 등이 그것이다. 본인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OECD가 한 권고들이 위기를 유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장기자본 도입의 자유화 등과 같은 조치들이 더 빨리 취해졌더라면 금융위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누그러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을 이런저런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OECD 가입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야기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실 한국이 OECD 가입하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로부터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도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시한 자유화조치들 가운데 어느 것도 후퇴시키지 않았다. 멕시코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에 되살아났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멕시코처럼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멕시코는 위기기간 중에 미국이라는 매우 강력한 무역 상대국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일본은 한국을 위하여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짧은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다.

질문 귀하가 199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귀하는 미국이 OECD의 창설 멤버가 아니며, 단지 準회원국으로 출발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사실인가? 한국이 OECD에 그대로 있는 것이 한국을 위해 바람직한가? 혹시 한국이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OECD를 탈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한국이 OECD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답변 첫째 질문부터 답변하겠다. 미국과 관련하여 귀하가 언급한 것은 본인이 1996년에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다. OECD의 전신은 OEEC, 즉 유럽경제협력기구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당시 마샬계획(Marshall Plan)이 집행되었다. 당시 미국은 OEEC의 準회원국이었다. 그러나 1960~61년에 OEEC가 OECD로 되었을 때 미국과 캐나다가 정회원이 되었다. 그 뒤 회원의 영역이 넓어져 非유럽국가들이 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또 1994년 이후에는 멕시코, 체코공화국,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97년 여름에 OECD에 가입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본인은 한국이 OECD를 탈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OECD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OECD의 토의 참가 등을 통해 주요한 규칙 제정자로 기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국제 뇌물관행과 부패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매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그렇다. 이런 문제들에 관한 한 OECD는 가장 중심적인 기구일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은 그런 체제를 개발하고, 또 다른 개도국들을 참가 가능한 각종 포럼으로 꾸준히 불러들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배구조문제의 경우 정말 그렇다. 한국은 규제개혁과 투자 문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한국은 다자간

투자협정 문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문제가 현재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투자문제는 계속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으로서, 교역, 투자, 자유화, 발전 등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대답은 '그렇다'이다. 본인은 한국이 OECD를 탈퇴하거나 한국에 주어진 임무와 약속을 져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유화 과정을 후퇴시킬 이유도 없다. 자유화는 분명히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세를 회복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본인은 한국의 국내정치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본인도 과거 캐나다의 하원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지도 않겠다. 본인은 다만 국회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인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OECD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이를 통해 OECD 가입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 왔다는 소문들을 종식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질문 3대 주요 통화들간에 목표환율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무총장은 어떤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는가?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변동환율제가 이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환율이 단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체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럽 지도자들은 달러-엔-유로貨 사이의 환율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WTO의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에서 어떤 것이 협상의제가 될 것 같은가? 또 그런 의제들은 바람직한 것들인가?

답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불안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도전과 좌절을 안겨다 주었다. 변동환율제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단기자본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대안들이 다양한 포럼들에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목표환율제 문제, 환율불안이 제도적 장치로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이 참가했던 여러 국제적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 가운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찬성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체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강화시켜 환율불안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목표환율제도 그 중 하나다. 아마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의견합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OECD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G22, G26, G32 그룹의 보고서에 기초를 둔 권고안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며,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WTO 라운드에 관하여 답변하겠다. OECD 무역위원회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WTO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ECD의 역할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OECD 무역위원회의 작업은 곧바로 WTO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문제들의 '사전 조리(Pre-cooking)'에 해당하는 분석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있다.

차기 라운드는 농업문제가 그 중심 대상이 될 것이다. OECD는 1998년에 농업장관회의(Agricultural Ministers' Meeting)를 가졌다. 이 회의는 각국의 농업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전 작업들이 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관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OECD가 내놓은 그 유명한 '생산자보조금 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와 '소비자보조금 상당치(Consumer Subsidy Equivalent)'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차기 라운드에 의제로 포함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OECD는 무역 및 경쟁 법규, 무역과 환경, 그리고 무역과 노동기준 등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무역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관세장벽이 아니라 非관세장벽이라는 인식이 있다. 비관세장벽들 가운데 어떤 것은 감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일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각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일본의 규제구조 때문에 일본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ECD는 이와 같은 핵심적인 무역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차기 라운드의 협상범주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어떤 회원국들은 모든 무역관련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라운드를 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질문하신 데 대한 아주 만족스런 답변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역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한 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본인의 생각이다.

질문 유로貨가 외환보유를 위한 기축통화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달러貨로부터 유로貨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또한 그런 대규모 전환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간의 금리차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만약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조정하지 않는 한 그 전환과정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무총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답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자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어떤 통화가 준비통화로 인식되면 그 쪽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

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 일이 예상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아마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사실, 일부 유럽지도자들은 유로화가 너무 강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유럽은 현재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최종 수입국'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두 통화간의 관계를 정확히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된다.

질문 최근에 OECD가 실시한 한국의 규제현황 조사는 정부의 권한, 경쟁정책, 무역개방도 등과 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전자, 자동차 등과 같은 특정 산업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가 이런 특정 산업부문들만을 검토한 정책적 의도나 이유가 무엇인가? 또,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에 비교해 볼 때 세계경제에서 OECD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답변 먼저 OECD가 특정 산업부문에 치중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런 검토를 요구한 것은 OECD가 아니라 각국 정부들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에게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정 부문들을 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 본인은 OECD의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 지 잘 모른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국은 자국의 규제체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전세계 각국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법들을 만들면서 규제를 위해 법률상 많은 여지를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

세계은행이나 IMF에 비교하여 OECD가 하는 역할에 관해 답하겠다. 전통적으로 IMF는 OECD가 다루어 온 분야들과는 다른 것들을 다뤄왔다. IMF는 자체 조사 논문들을 통해 각국의 거시경제적 기초여건들을 살피고 있다. 이런 논문들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 이에 반해 OECD는 거

시경제정책을 비롯하여 정부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12~18개월 주기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서는 특정 국가의 어떤 구조적인 정책이 건전한 것인지, 또 교육적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OECD는 보통 學際的인 능력으로 불리는 것을 갖고 있다. OECD는 국방부문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공공정책을 함께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물론 문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29개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진 일부 非회원국들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는 러시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불가리아를 검토하였고, 현재는 브라질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구본영 前OECD 대사도 기억하고 있을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OECD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앞으로 신흥개도국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은행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의 활동은 매우 직접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캐나다에서 경제 및 지역발전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IMF와 본인 간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재무장관만 접촉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정부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내 모든 장관들과 접촉하고 있다.